이건희·재용 부자 법정 출두

"아들 도의적 책임 없다" "법정 선 부친 안타깝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왼쪽) 전 삼성그룹 회장과, 증인으로 나온 아들 재용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이재용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11분께 회색 양복과 보라색 넥타이에 검은 구두 차림으로 벤츠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완수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선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아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서는 심정에 대해 묻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최근 몸 상태가 어떠냐는 질문에는 "힘들다"며 얼굴을 잠시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이 전 회장보다 10여분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재용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된 소감이나 법인주주들이 실권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구입한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입장했다.

당초 이들은 부자는 나란히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법원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먼저 법정에 입장한 재용씨가 화장실에 가던 중 나중에 입장하던 이 전 회장과 마주치는 바람에 서로 말없이 바라보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1시 정각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용씨는 남색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을 하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이씨는 연이은 카메라 불빛에 잠시 놀라는 기색을 보이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재용 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부친을 비롯한 삼성 핵심 임원들이 법정에 선 사실이 안타깝지 않느냐고 묻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일련의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당시엔 잘 몰랐다"면서도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고발이 제기됐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음을 시사했다.

재용 씨의 증인 신문에 앞서 변호인은 부친인 이 전 회장이 아들의 증언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으나 이 전 회장은 직접 "그냥 있겠다"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아들의 증언을 지켜봤다.

한편, 이날 법정 주위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법정입구에는 태안군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0여명이 '삼성은 불법자금 7조원으로 검은재앙 태안을 살려라'는 팻말을 들고 이 회장 부자에게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이건희, 퇴정 허가 불구 자리 지켜

이재용, 긴장한 표정 차분한 답변

각의, 한미FTA 재의결

이달중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FTA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어 다시 국무회의에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 FTA안을 올려서 의결하고 18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FTA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 중 국회에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쇠고기와 닭·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자,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부시, 북핵폐기 예산지원법안 서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 면제돼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핵폐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 서명식을 갖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9일, 상원은 27일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확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 법안 서명 및 공포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인도 뭄바이 물난리 1일 인도 뭄바이에 많은 비가 내려 길거리가 온통 물로 뒤덮였다. 택시들이 물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택시를 움직이려 애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30개월 이상·미만 美쇠고기 통관 단계서 분리 방안 검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미만의 쇠고기는 법적으로 같은 상품일까, 다른 상품일까.

아직은 검역이나 통관신고상에서만 존재하는 구분이지만 아예 수입상품 분류관리의 기초에서부터 두 가지를 분리해 관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통관단계에서 구분해내는 방안의 하나로 상품분류 기준격인 HS코드를 30개월령 이상과 미만은 물론,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포함 가능 부위별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 2단위에서 10단위까지 구분되는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국제표준형을 써야 하지만 그 이하는 각국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

현재 한·미간 쇠고기 협상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업자가 주도하는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여부를 한국행 쇠고기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과 미만 쇠고기는 물론, SRM이나 내장처럼 SRM 포함 가능성이 있는 부위들마다 별도 코드를 부여해 통관절차를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한국 수출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검증

"치아식별법 등 활용 하겠다"

샤퍼 美농무장관 밝혀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이 최근 '동물ID시스템(NAIS. National Animal ID System)'에 등록된 소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지 검증하기 위해 치아식별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샤퍼 장관은 지난 25일 전화회견에서 한·미간에 합의한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 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샤퍼 장관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동물ID시스템'에 등록된 소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다른 (월령)검증방안을 활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샤퍼 장관은 "구강(口腔)검사 등이 대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강검사란 소의 치아를 보고 연령을 판별하는 '치아식별법'을 일컫는다.

미 농무부는 동물ID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등록된 동물들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원산지 및 나이 등을 입증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치아식별로는 소의 월령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데다 소의 원산지를 규명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